

## ‘영산강 살리자’ 한목소리

19일→52일→99일 녹조일수 증가…오염 최악  
김탁 도의원 도정질문 “종합 관리대책” 촉구  
전남도 “생태복원 용역…정부정책 반영 노력”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시지와 관련해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악의 수질오염에 직면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도의회 김탁 의원(목포4)은 23일 열린 31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정책감사를 통해 내년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해수유동, 보 절기, 수문개방 등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인 영산강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산강수 계 녹조 발생일은 2014년 3회에 걸쳐 19일, 2015년 4회·52일, 지난해 4회·99일로 발생기간이 길어졌다.

녹조발생 모니터링은 영산강물환경연 구소에서 매주 1회 시료를 제취해 분석, 기준조과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단계별 수질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전후한 물 흐름 정체로 녹조발생 수질지표인 클로로필a가 25.8mg/m<sup>3</sup>에서 67.7mg/m<sup>3</sup>로 대폭 증가하는 등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에 고농도 녹조발생이 반복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능생명과학공동연구원에 영산강 퇴적토와 수질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서도 영산강 바닥 퇴적토에서 검출된 유해중금속 수치가 4대강 사업 시행 전인 2009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제취한 하천퇴적물에 함유된 카드뮴과 구리·납·비소 등 유해 중금속 농도는 2009년과 비교해 최대 342배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지만, 가시적 노력

은 거의 없었다”며 “주변 시·군이 참여하는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수계관리위원회 등 역할분담 방안을 정립하고, 학계·환경단체·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영산강 살리기 시·도민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1981년 하구도 죽조 이후 수질이나 생태계 악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문제점 진단, 생태복원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으로 시동을 건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연구용역은 1단계로 내년 6월까지 해수유동 영향분석과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2단계로 내후년까지 수질개선,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뿐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도 실·국, 영산강 주변 시·군,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 협력적으로 협력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592억 뇌물’ 박근혜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검찰 “사의 국정농단”

변호인 “무죄” 주장

재판부, 사건 병합심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이 23일 열렸다. 4월 17일 기소된 아래 36 일 만이다. (관련기사 3·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구속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정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

주지진 않았다.

정식재판의 시작인 만큼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들 6명이 나왔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온 죄수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학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뒤졌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요구, ‘블랙리스트’ 시지, 문체부 공무원 사직지시, 정·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 등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통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 국화꽃을 들고 묘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참여정부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노무현 8주기 추도식…“모든 국민의 대통령”

“현직으로 마지막 참석…성공해 다시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도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며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꿈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며 “하지만 저는 앞으로 업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한개의 질문  
백개의 생각

## 학부모 특강 및 호남권 11개 대학 공동 대입 설명회

일시 2017.5.26(금) 13~18시30분

장소 광주교육연수원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진행 대학별 발표 및 질의응답

특강 이범(교육평론가)  
새 정부의 대입제도와 미래교육의 변화

문의 진로진학팀 380-4571(5)